

국회 일정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실질적인 파업을 결행해야 한다

▶ 관련 기사 3면

2016년 경제정책방향

새해에도 노동 개악을
계속하겠다는 박근혜

16면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

6~7면

문답으로 알아보는
시리아 전쟁

8~9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9~10면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
엥겔스는 차별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이해했나?

12~13면

스페인 총선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11면

중국
노동자 투쟁이
폭증하다

7면

누구의 딸일까요?

“[아이스스 장악 지역을] 융단폭격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테드 크루즈,
거기 사는 민간인은 안중에 없나

“흑인이 덜 유명하고 좀 수준 낮은 대학 또는 느리게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 “미국 흑인 과학자의 대다수는 좀 처진 대학 출신이다.”
미국 대법관 안토니 스칼리아의 인종차별 발언

“광화문광장 양쪽에 넓은 도로가 있어 차가 달리는 곳이고, 여기에 3천~5천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공안의 위험이 있는 것”

경찰청장 강신명이 본
3차 민중 총결기가 위험한 이유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연탄을 나르던 나이지리아 유학생에게

“[김무성은] 트럼프 같아.”
〈로이터 통신〉 서울 특파원의 한탄

“사람이 미래다.” / “당신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산그룹의 광고문구들,
이래 놓고 20대부터 희망퇴직

“혼용무도”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다”란 뜻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앞으로 보낸
연하장

“배[세월호]가 기우는 상황에서 선미에 있던 학생들에게 밑으로[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
목포해양경찰청 123정 박상욱 경장의
변변한 책임전가

“상황 전파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중요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못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나간 해경에
구체적 지시를 못한 이유

“16회”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용산기지 등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탄저균 시험 실험,
5월에는 딱 한 번이라고 변명하더니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 ★ 단원고 교실 촛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 ★ 시리아 위기를 끝내지 못할 유엔 안보리 결의
- ★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 ★ 서평 《해방 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해방 공간,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적 투쟁의 주체였음을 생생히 보여 주는 책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저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 배달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휴일집회는 물론 1인 시위, SNS 활동, 심지어 언론 인터뷰 등까지 불법이고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을 동원해 주요 활동가들을 면담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10년 전에 시행한 주 40시간제가 국가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탄압에도 저항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반갑게도 12월 6일 노조다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출범했다. ‘토요 근무 반대·우정노조 지도부 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본부로 전환한 것이다.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투쟁본부는 토요 근무 재개 항의 운동을 지속하며 12월 19일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청구를 시작했다. 원래는 평일에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연가 신청을 하자 우정사업본부가 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가보상을 지켜 줘야 할 우정노조는 2014년에 미지급 연가보상비 소송



집배원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 하자 노조다운 노조를 건설해 투쟁에 나서려 한다.

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진행하고는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1월 25일에 당시 비대위 최승묵 공동대표가 우정노조 웹사이트에 미지급 연가보상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중노동 실태는 이미 악명 높다. 집배원 1인당 하루 평균 2천여 통의 배달량은 노동자들을 주간 평균 64.6시간의 장시간 근무로 내몰고 있다. 시골 집배원은 하루 1백50km를 오토바이로 달린다.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 채 배달해야 하므로, 집배원들은 운전 중에 깜빡 졸기도 한다. 그래서 집배원 평균 재해율은 2.54퍼센트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4배에 이른다.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겨울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안

전사고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인다.

집배원들은 이러한 장시간·중노동 때문에 그동안 연가도 마음 편히 쓰지 못했다. 내가 쉬면 옆의 동료가 더욱 고생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체국 배달 시스템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배달하는 구역담당제다. 자신이 빠지면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구역을 나눠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 택배는 익일, 보통 우편물은 4일 안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물량을 바로 소화해야만 물량이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고 싶어도, 병가나 연가를 쉽게 쓰지 못한다. 이로 인해 미사용 연가가 늘어났다. 집배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현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추야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급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 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균등분배로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바꿨다.

정부는 이미 성과평가 규정도 바꿔 평가 대상자의 10퍼센트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최하위등급 선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 중에 최하위등급을 지목해 속아내라는 것이다.

정부는 ‘퇴출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퇴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면 해고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내년 초 성과급 차등 분배 저지 투쟁은 무척 중요하다.

정부는 2007년에도 퇴출제 도입을 시도했는데 공무원노조의 저항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 지금도 실제 성과급 차등분배와 퇴출제 등을 현장에서 관찰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간부 징계

등 탄압을 강화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부터 투쟁태세를 갖추야 한다. 이 싸움을 잘 해야 퇴출제 저지 투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인사기구 부도어음

한편,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이충재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야합한 대가로 얻어냈다고 한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인사기구)는 몇 달 만에 부도어음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충재가 치켜세운 “보수현실화와 정년연장, 근속승진 등 인사정책 교섭 약속”이었던 인사기구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부는 개선은커녕 성과급제 확대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 온건파인 공무원노조 총연맹(공노총)조차 최근 집회를 열

강제 연가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미사용 연가가 늘어나 연가 보상비가 증가하자,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연가를 쓰게 했다. 12월 6일 부산 집회에서 발언을 한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가 강제연가와 강제반가를 통해 연가 일수를 줄여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심지어 매달 외출과 연가라고 행정포털에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집배 업무는 그대로 수행시킨 우체국도 여럿 있다” 하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이 토요 근무 재개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려고 연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하고, 1인 시위를 한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연가보상비를 축소하고자 연가보상비 한도를 11~14개로 제한해 놓고는, 심지어 연가보상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 “2012년 한 해만 연가보상비 미지급액은 76억 원이었으며, 평균 미보상 일수는 3.35일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에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2013년에 대체휴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우정노조와 합의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투쟁본부 연가보상비 미지급 소송 청구 기자회견문) 그레 놓고는 이제 와서 토요 근무까지 강제하는 것이다.

우정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본부가 미지급 연가보상 대책 마련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투쟁본부가 집배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대변해 간다면, 기층 노동자들이 투쟁본부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윤필언

어 “인사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약속 아무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사수넷)가 인사기구에 대해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보다 각별히 집요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박근혜 정부가 애써 ‘절감한’ 지출을 다시 늘리려 할까” 하고 경고한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권은 우리들에게 단 한 줌의 호의도 없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힘들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대중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등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흑독한 탄압은 국제적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탄압과 민주주의 권리인 집회 권리의 침해 속에서도 민중총궐기는 꽤 큰 규모로 두 차례나 더 열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항이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차 총궐기와 마찬가지로 2, 3차 총궐기의 주된 대열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각종 진보·좌파 단체였다.

'노동자들은 더는 싸울 능력이 없고, 싸워도 지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유행이지만, 노동자들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 준 셈이다. 물론 단순한 민중의 일부로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 고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2016년 경제정책과 노동개혁

현재 노동자 투쟁은 정치적 항의의 형식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상당한 저항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사용자들의 이윤을 공격해 '노동개혁'에 제동을 거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함 때문이다. 애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궐기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언했었다.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 속에서도 박근혜는 특유의 집요함으로 연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다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약속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합의를 압박하는 한편, 직권상정과 심지어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마저 만지작거리고 있다.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지침 관철도 연말 연초에 강행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께 열릴 4개 노동법 학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정부 지침 초안을 공개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에서 연말 연초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발표를 바탕으로 내년에 노동개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 체제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노동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 구조조정이 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리해고를 앞아서 당하라는 얘기다. 또, 채용부터 평가, 보상, 배치전환, 퇴직

까지 근로계약 전반에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경총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12월 17일 "반(反)기업적 집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쟁점 법안의 협상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것은 안철수의 분당과 안(安)의 중도개혁 노선 압박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계급적 성격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은 대표 취임 직후에도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우리 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문제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당론으로 '노동개혁' 5법에 반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법을 제

외하고 논의 가능'에서 '비정규법도 논의 가능'으로, '논의하되 처리 불가'에서 '비정규법을 제외하고 처리 가능'으로 거듭 후퇴해 왔다.

결국 12월 21일 입법전략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임시국회(1월 8일까지) 기간에 심지어 비정규법에서마저 후퇴할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파업

노동운동 안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잖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원내대표의 직무거부, 새누리당의 공천물을 둘러싼 계파싸움 등 정치인들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다름으로 국회 일정과 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싸우지만", 노동자 착취를 놓고는 "형제"라는 마르크스의 지적을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입장만 놓고 봐도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노동개혁' 법안 일부(비정규법을 제외한 3법)가 통과될 위험은 매우 크다.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비정규 2법만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머지 3법도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법률들이다. 통상임금,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문제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쟁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래 속에 '노동개혁' 5법이 패키지로 통과될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설사 국회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 해

도, 노동자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야합을 위한 숙성 기간이 될 공산이 크다. '노동개혁' 법안 저지로 귀결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지침도 연말 연초에 강행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1월 중에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를] 종합 마련·시행"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국회 일정이나 지침 발표 지연에 운을 맡기려 하기보다 단호하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파업을 단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2월 17일 회의에서 28~30일 '순차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이나 지침 발표 일정에 따라 파업 일정도 순연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총파업 일정의 연기는 이미 세 차례나 있었는데, 거듭되는 파업 취소와 연기는 지도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조합원들의 열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순차파업이라는 방식도 실질적인 파업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당선 이후 여러 차례 "시한부 총파업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전면 정치총파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파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만 노동계급이 노동개악을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그래야 내년에 '노동개혁' 법률이나 지침의 실제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 '노동개혁' 법률이나 지침이 노동계급 삶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 또는 무력화하려면 현장 투사들과 좌파들은 이런 투쟁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성장론자이자 박근혜의 심복 유일호를 그 자리에 내정한 까닭이다.

그런데 현역 의원인 그는 총선에 나가려고 바로 한 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했다. 반대로 최경환은 "국가비상사태"라더니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돌아갔다. 친정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녹록지 못한 처지를 보여 준다.

"노동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할 심복 부총리도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권 등에서 김무성·유승민 등을 견제할 당내 카드도 필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을 위한 입법도 이뤄내고, 권력 누수도 막겠다는 몸부림인 셈인데, 조중동 같은 기업주 언론마저 개각을 비판한다.

그만큼 범여권이 일사불란하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의화가 개악 법안들의 직권상정(사실상 날치기)을 거부해 박근혜가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박근혜의 일방통행 스타일

에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정의화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 이상으로 버티진 않을 것이다. 그는 12월 22일에 쟁점 법안 합의를 중재하려고 시도했다.

무엇보다 온갖 탄압과 협박, 집회 금지 조치를 남발했지만, 경찰은 세 차례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막지 못했다. 11월 14일 대규모 민중총궐기(실제로는 노동자대회+α)에 이어 두 차례 더 이어진 민중총궐기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완강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 줬다.

야당을 압박하려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얘기도 나오지만, 최근 박근혜 지도도 조사에서 부정적 답변이 한 달여

만에 50퍼센트를 넘는 여론의 역풍도 불고 있다.

"반기업으로 보이면 안 된다"

한편, 12월 16일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라고 규정한 새정치연합 문재인은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법을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기업 집단처럼 비칠 수 있다"며 쟁점 법안들의 논의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1일 문재인은 김무성을 만나 각종 개악 법안들의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표를 의식해서 '악법 반대' 꼬리를 흔들고는 정작 당론을 결정할 때

는 '반기업 집단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계급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안철수의 탈당(과동조 탈당)으로 어수선한데다 당내 주도권 쟁투로 말미암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면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를 만큼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그와중에도 새정치연합이 자본가들을 의식해 쟁점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반대"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말해왔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의 행보에 노동자들의 삶과 조건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김문성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가 2009년 점거파업 이후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인력 필요시 신규채용(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 우대), 희망퇴직자, 해고자를 각각 4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비율로 충원하기로 했다.

후순위 복직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기로 했고, 소송 취하를 전제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 직후 <경향신문>은 사실에서 “극한 대결로만 치닫던 쌍용차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측이 내년 1월 말까지 비정규직 6명을 포함해 해고자 18명을 채용하겠다는 것 외에 복직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복직자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수준도 턱없이 부족하다.

쌍용차지부는 올 초 교섭이 시작될 때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1백87명 전원 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1년 가까이 시간을 질질 끌며 기한 명시 없는 ‘선별적 복직’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리고 끝내 2017년 상반기까지 몇 명을 복직시킬지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채, 주간



2009년 77일간의 점거파업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대한 잠정 합의가 됐다.

연속2교대제 시행, 후속 모델 출시 등의 시점에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고만 밝혔다. 해고자 1백87명 중 다수는 또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가까스로

이 때문에 쌍용차지부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반은 58명 대 53명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적잖은 해고자들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 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사측이 검토하겠다고 한 인력 충원 시점도 경제 상

황과 자동차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악랄하게도 사측은 해고무효소송 취하와 시위 중단까지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누가 먼저 복직할 것인지를 두고 해고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도 있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산 자’(비해고자)와 ‘죽은 자’(해고자)가 충돌하는 고통을 겪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 점은 특별히 뼈아플 것이다.

사측은 이후에도 ‘해고자 복직이 공장 안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장 안과 밖의 노동자들을 갈라

놓는가 하면, ‘2009년 점거파업 말미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에 해고자 복직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와 해고자 사이를 이간질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이 외쳐 온 “함께 살자” 하는 구호는 노동자들의 화합을 강조하는 상징이었다. 옳게도 쌍용차지부는 2012년에 무급휴직자 복귀를 적극 환영했고, 지난 2년여간 꾸준히 공장 앞에서 홍보전 등을 벌이며 공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지지를 끌어냈다. 7년의 장기 투쟁 속에서 많은 해고자들이 생업에 나서 투쟁에서 멀어졌지

만, “단 한 명도 배제할 수 없다”며 1백87명 전원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사측은 이런 해고자들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안을 내놓고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노조 총회에서 찬성표를 찍은 해고자들의 심경도 복잡할 것이다. 적잖은 동지들이 술한 탄압과 역경 속에서 오랜 기간 투쟁해 오면서 지친 것도 사실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쌍용차 해고자들이 7년 만의 복직 합의에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다.

박설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위기 전가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에만 ‘희망퇴직’을 4차례나 실시했다. 이 속에서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1천여 명이 공장을 떠났다. 12월에는 20대 초반의 입사 1~2년차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퇴직을 종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경제 위기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증가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자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은 사회적 비난을 의식해 “신입사원은 [퇴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입사 3~4년차인 20대 젊은 노동자들도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사측은 ‘쪼뼨’(사측이 쪼어서 희망퇴직 강요하기) 대상 노동자들 중 퇴직을 거부한 40여 명을 내쫓으려고 협박과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측은 퇴직 거부자들에게 “지금 나가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거부하면 정리해고 되고 위로금도 한 톨 못 받는다” 하며 협박했다. 이들을 대기 발령 시키고, 심지어 수천 만 원을



청년 명퇴 청년에게 두산그룹이 하고 싶은 이야기.

써 가며 컨설팅 업체를 시켜 감시하고 괴롭히고 있다. 현재 사측은 12월 23일에 해고 대상자를 발표하고 한 달 뒤에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측의 ‘쪼뼨’을 거부하고 싸우고 있는 입사 4년차 20대 후반의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월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려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2백억 원을 쾌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사장의 연봉이 10억 원이었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일해 온 우리들에게는 위로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물량이 없다고 계속 연월차 쓰고, 임금도 거의 동결되고, 성과급은 국물도 없었던 시절을 버틴 죄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합니다. 화장실은 오전·오후 한 번씩만 가라 하고,

핸드폰은 걷어서 사용 못하게 합니다. 또, 하루에 회고록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쓰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글씨가 크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하며 울분을 토했다.

모범기업?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신규채용을 늘린 모범기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선정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를 일찌감치 도입해 전년에 비해 채용 규모를 두 배 이상(3백58명)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신규로 채용된 생산직 2백 명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었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정년을 앞둔 노동자뿐 아니라 20대의 신규 노동자들까지 퇴직을 강요하며 거리로 내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저성장과 퇴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미래를 얼핏 보여 준다.

“사측은 우리[퇴직 거부자]가 근태 불량자이자 직급제 도입 이후 평가가

안 좋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근거를 대라고 해도 보여 줄 수 없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발령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생산직에서 저성과자를 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라인인 노동자들이 협업해서 굴삭기 하나를 만드는데, 내가 저성과자면 나와 같이 일한 모두가 저성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산직 대기발령자 중 절반 이상이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전·현직 간부들입니다. 그동안 눈엣가시 같던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찍어 내려 한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희망퇴직을 권고받을 때도 전사노조(친 사측 경향의 기업노조)로 옮기면 빼 준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무직 노동자 26명과 생산직 노동자 21명이 ‘쪼뼨’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다. 또, 경영 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산업 재편과 인력 감축에 나선 두산그룹에 맞서기 위해 두산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공동대응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지와 연대도 중요한 것이다.

소은화



KT노조 정운모 집행부의 밀실합의를 비판하며 투쟁해 온 KT민주동지회 노동자들.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KT노조 정운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운모 집행부는 뽀뽀스럽게도 공탁금까지 걸어가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2월 16일 항소를 기각하며 정운모 집행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확인했다.

공탁금

2014년 4월 KT에서는 노동자 8천 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운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 안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KT노조 집행부는 이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처리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이번 항소심에서도 해당 노사 합의를 무효화하라는 요구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KT노조의 친사측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합의를 '직권조인'으로 처리하던 관행에 타격을 준 것은 성과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운모 집행부의 어용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또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무시하며 직권조인 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2015 임단협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라는 문구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기재한 '정리해고'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보다 더 손쉬운 정리해고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KT민주동지회는 이 정리해고 단협 조항 도입시도에 맞서 20여 일이 넘게 노숙농성 등 항의행동을 벌였고 결국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KT노조 정운모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어용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KT민주동지회 등 제 단체들은 지난 1심 판

결 이후 5백6명의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이 소송 또한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므로 추가 소송 또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운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2014년도 퇴직자를 포함한 KT전체 조합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KT노조 정운모 집행부에 맞선 싸움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원준 KT민주동지회 회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뽀뽀스럽게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통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원 폐쇄 조치 등에 반대했다. 전염병 확산 저지보다 병원 이윤을 더 중시한 것이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도 시원찮은 자가 쫓겨난 지 1년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다니, 이 나라 지배자들의 뽀뽀함은 정말 끝이 없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위한 각종 정책도 강행·추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형표 선임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2015년 말까지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 문형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휴가와 가족 식사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장관 청문회 때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형표는 공적연금 개악 전문가이기도 하다. KDI 재직시 발표한 논문

서 그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복지병 문제나 저조한 저축 수준의 문제 등도 연금을 비롯한 지

나친 정부의존적 사회보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므로] 급여혜택의 증대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복지병"

지난 5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약을 밀어붙이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상향'이라는 공수표를 제시했을 때, 문형표는 이조차 극구 반대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킨 개약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업무를 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기금의 금융시장 투기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음)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이 역시 그의 오랜 지론이다. 이런 전력 덕분에 박근혜를 비롯한 이 나라 지배자들은 문형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적임자로 여

길 듯하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고 한다.

저들에게 5백조 원이나 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눈먼 돈일 것이다. 그러나 주식같은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금기금의 손실 위험도 더욱 커진다. 즉, 노동자들의 노후를 담보로 기업들을 지켜주겠다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 전가책인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노후보다 기업주들의 이윤 보장에 더 관심있는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

윤필원



김종환

파리 공격 이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시리아 주변국들은 전쟁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갈수록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UN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아사드는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고,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각각 시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의 영향력은 더 견고해진 듯하다.

미국은 이라크 상황은 시리아보다 낫다고 강변한다. 이라크에는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지상 병력(이라크 군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배나 많은 병력과 미군의 공중 폭격에도 이라크 군은 아이시스가 장악한 라마디(바그다드 인근의 도시)를 반년이 넘도록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의 제국주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중동에 개입하지만, 누구도 현 국면에서 빠져나갈 방도에 대해서는 흐릿한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와 네오콘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공상이었을지언정 모종의 계획(이라크 국가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를 이식한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 좌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과 함께, 무슬림 혐오와 테러 방지를 구실로 한 차별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자신의 역량을 아시아로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에도 미 해군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大)중동’ 지역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한다.

미국 지배자들의 문제는 중동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리아 전쟁이 낳은 난민 사태와 파리 공격 등으로 유럽연합이 더한층 중동에 엮이면서 더 어렵게 됐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년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을 뒤집고 1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미국은 “아이시스 박멸” 운운하지만 시리아·이라크 현지에서 미국이 발

휘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이시스 제거에 엄청난 지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미군과 영국군의 팔루자 탈환 작전만전 운동 진영은 “팔루자 학살”이라고 부른데에 지상군 1만 3천5백 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시스를 제거하려면 팔루자 때처럼 도시를 하나씩 탈환해서는 효과적이지 않고 … 라마디,

티그리트, 모술[아이시스가 장악한 주요 이라크 도시들]과 시리아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쳐야 한다.”

미국은 이런 대규모 병력을 자국에서 동원하기를 꺼린다.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시리아 현지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거나, 시리아 정부군을 재건해서 아이시스를 몰아낸다는 구상도 실현가능성이 낮다. 미국 지배자들이 아주 난감한 이유다.

유럽 반전 운동의 대응과 논쟁들

지배자들이 더한층 중동에 개입하면서 그에 맞서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영국은 과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가장 크게 구축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운동을 이끌었던 전쟁저지연합 지도부는 지난 몇 년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다. 미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연설 기회를 제공하며 사실상 러시아 등을 지지하는 효과를 냈

다. 또한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가 격돌했을 때 푸틴에 대한 비판은 한사코 삼가고 서방의 개입만 비판했다.

최근 우파가 전쟁저지연합을 공격하고 나서자 이런 진영 논리는 반전 운동이 분열하는 계기가 됐다. 전쟁저지연합이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기를 꺼린 것을 문제 삼으며 일부 좌파가 우파의 공격에 편승한 것이다. 반면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은,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우파에 맞서 전쟁저지연합을 방어했다.(지난호 기사 [알렉스 켈리니코스의 논평]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참조)

이런 우파의 공격과 부분적 분열이 있음에도, 하원이 시리아 공습안을 통과시킬 때 전쟁저지연합은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4~5천 명 규모의 반대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영국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금 전쟁저지연합은 정치적 급진화의 한 경로가 됐다(제러미 코빈에 관한 7면 기사 참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운동 내 진영 논리와 논쟁하면서도 기층에서 전쟁저지연합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산당 출신 세력과 녹색당 등이 이끈 평화 운동이 있었

는데 그동안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 운동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맞서는 진보 세력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파리 공격 이후 독일 정부가 파병에 나서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의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될 때 5백 명 정도가 항의 시위를 벌이며 다시금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좌파당)를 통해 내년 초에 반전 대회를 개최해 운동의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쿠르드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시리아 쿠르드족이 미국과 손잡고 아이시스와 싸우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혁명가들은 쿠르드족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하고 쿠르드족이 터키 등지에서 탄압받는 것에 반대해 그들과 연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쿠르드족이 제국주의 세력과 손잡는 것은 실수라고도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은 쿠르드족 독립에 진지하지 않다. 미국은 아이시스에 맞서 싸울 때는 기꺼이 쿠르드족을 이용하지만, 쿠르드족의 세력 강화를 우려한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점을 공격하는 것은 방조한다. 터키가 미군에 공군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인 이라크에 병력 수백 명을 파병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당시 스페인은 총리를 실각시킬 만큼 거대한 반전 운동이 일어난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아 전쟁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석들이 난립하고 있다. 많은 좌파가 제국주의보다 아이시스를 더 큰 문제로 여겨 폭격을 지지한다. 일부 좌파는 러시아를 지지하며 이슬람주의 운동을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여겨 혼란을 더했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개혁주의적 이슬람주의 운동과 아이시스 같은 반동적 지하드 세력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혼란도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북부 도시 코바니에서 아이시스에 맞서 싸운 것을 보며 환상을 품었다가 그들이 미국과 손잡는 것을 보면서 혼란에 빠진 세력도 있다.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스페인은 하나로 단결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배자들의 전쟁 격화는 대중적 반감을 낳고 이것은 반전 운동을 건설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이 과제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2016년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파리 공격 이후 지배자들은 중동 전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자국에서 차별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연장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행히도 좌파전선 등 일부 좌파도 이에 동조했다. 영국도 최근에 경찰의 발포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우익은 또한 집요하게 난민을 아이시스와 연결시켜서 국경 봉쇄를 강화할 구실로 삼고자 한다. 유럽 지배자들은 유럽 국경을 통제하는 기구 프론텍스의 내년 예산을 2억 유로(2천6백억 원)가량 증액하고 자체적인 ‘국경 수비대’를 만들어서 회원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국가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 ‘난

민이 복지와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다’는 식의 생각을 부추긴다.

지배자들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부추겨서 경제 위기가 낳은 대중의 불만을 영풍한 곳으로 돌리고 평범한 유럽인들이 난민에 느끼는 어마어마한 연대감을 뒤흔들려 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것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냐에 사회 전체가 좌경화하느냐 우경화하느냐가 걸려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2016년) 3월 19일로 예정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하 국제 공동 행동)은 예년보다도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 공동 행동은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그동안 각국에서 노동조합과 좌파 단체, 이주민 단체와 무슬림 단체

들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런 국제 연대가 누적되면서 생긴 유럽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최근 난민 사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한국도 2014년과 2015년에 국제 공동 행동에 동참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으박지르고 몇몇 이주민을 한사코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2백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과 한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내년에도 한국이 국제 공동 행동의 일부가 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주민 단속과 정치적·시민적 권리 축소 공격에 저항하자. 국내 무슬림 공동체, 이주민 공동체와 접점을 만들고 협력을 키워야 한다.

유럽의 인종차별 반대, 난민 연대 운동 소식

그리스에서는 치프라스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난민에 연대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모처럼 단결하고 있다. 그리스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다.

전임 신민당 정부는 2011~12년 터키 접경 지역에 철조망을 둘렀고, 그 뒤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난민의 수가 급증했다. 육로가 가로막히자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통해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국경 통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철조망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철조망을 철거하지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말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과 KEERFA뿐 아니라 시리자 내 반(反)치프라스파, 민중연합, 그 외 시리자 탈당파 등이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며 철조망을 향해 행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터키에서도 (비록 규모는 그리스만큼 크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날 철조망 반대편에서 화답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시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3월에 있을 국제 공동 행동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연말까지 독일로 난민이 1백만 명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지에서 “환영 추진위원회”라는 이

름으로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려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난민에 반대하는 우익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종차별적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출발한 ‘독일을 위한 대안’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나치들도 그 당에 가세했고 파시스트 단체로 변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당은 전국 지지율이 10퍼센트가량 되고 동독에서는 16퍼센트까지 오른다.

독일 ‘마르크스21’ 활동가들은 국제 공동 행동을 활용해 난민 연대 운동을 키우고 우익의 성장을 막으려 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을 파시스트로 보지 않는 좌파들의 오랜 정치적 혼란 때문에 반파시즘 운동이 약하다. 그러나 1월 〈샤를리 에브도〉총격 사건 이후 반자본주의신당(NPA)의 몇몇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재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 공동 행동이 벌어질 듯하다.

하지만 관건은 NPA 같은 조직 좌파를 포함시켜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파리 참사에 대한 NPA의 성명은 1월 〈샤를리 에브도〉때 성명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나아졌지만 실천적으로 운동 건설로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현지 활동가들은 NPA의 조직적 참여를 이끌려고 분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십 개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가 국제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해저 터널 건너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에 연대하는 활동도 활발하다. 영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난민 모금에 참가할 만큼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SWP 활동가들은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지역 수준에서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혁명가들이 난민 문제에 우호적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엔루차 활동가들은 한 달 전부터 좌파연합(IU), 포데모스를 끌어들이며 국제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산업 도시인 카탈루냐에서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연합’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카탈루냐 플랫폼(PxC)’의 의석이 67석에서 8석으로 곤두박질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도 국제 공동 행동에 맞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독일 마르크스21, 스페인 엔루차 등 유럽의 국제사회주의경향(ST) 활동가들과 논문 대화를 바탕으로 했다.

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면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중심지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항의도 급증하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중국노동회보’(China Labour Bulletin)가 보도한 파업 지도를 보면, 11월 파업 건수는 301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로는 가장 높았다.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광둥성이 노동자 파업의 주 무대다. 이곳의 11월 파업 건수는 56건으로 다른 성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제조업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인데, 특히 경기가 나쁘다. 차이신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고용은 25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수많은 농민공들이 실직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광둥성에서 벌어지는 대다수 파업들은 공장의 폐쇄·합병·이전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장이 야반도주하자 노동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지방정부 청사로 행진하기도 했다. 지난 두 달 동안 광둥성에서는 75개 공장 노동자들이 항의 행동을 벌였다. 그 항의 행동의 절반에 경찰이 출동했고, 아홉 곳에서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지난 11월에 파업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건설업이다. 모두 1백33건으로, 대부분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이었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건수는 10월에 비해 11월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내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을 적극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 부문 노동자 파업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1월에 15건을 기록했다. 여기에서도 핵심 요구는 체불 임금 지급이었다. 경기 부진으로 광산업도 석탄 가격이 하락하고 고용

이 감소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허강시에 있는 광산 회사들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석탄 가격이 1년여 만에 60퍼센트 정도 하락하면서 대량 감원을 했다. 허강의 대표적인 국유 탄광회사인 룡메이 기업집단은 지난해부터 적자를 보면서 국가 보조금을 37억 위안 받았지만, 노동자 20만여 명 중 절반을 해고할 계획이다. 룡메이 기업집단 광원들이 채광 역사 1백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 도시로 불리는 랴오닝성 푸순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푸순의 연간 석탄 생산량은 전성기의 2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세틴 교수는 “중국 석탄업계는 지난 20여 년간 최대 호황을 누렸으나 과잉투자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장강 삼각주의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에서 공장폐쇄와 임금과 사회보험 체불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 활동가들이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판위 지역의 위생 노동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판위노동자센터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쟁의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12월 초 광저우와 포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 활동가 20여 명이 중국 공안들에 연행됐고, 그중 8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주샤오메이는 라이드신발 공장 노동자들 파업과 판위 지역의 위생 노동자 조직에서 큰 기여를 했다.

판위노동자센터장인 쟁페이양은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 혼란을 촉발한다”는 혐의로 지난 12월 4일 구속됐다.

쟁페이양의 변호사는 공안국이 면회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접견 기회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이 사건은 “국가안보” 사건이라고 말했다.

1위 부동산개발업체에서도 임금 체불 비밀비재



중국 1위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이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임금이 체불돼 지난 3개월 동안 노동자 항의가 19번 일어났다.

11월 3일 구이린의 완다 플라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플라자 지하에 올라가거나 거리에서 배너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완다 플라자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이곳만이 아니었다. 념샤 자치구 인환의 건설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에 항의했으며, 쓰촨성의 지양, 푸젠성의 취안

저우, 안후이성의 푸양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노동자 항의들이 있었다.

임금 체불은 중국 건설 산업에 만연한 문제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정식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건설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하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나중에 지급되기 일쑤다.

중국 제1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의 사례는 중국 전역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잘 보여 준다.

아이시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났나?

아이시스는 철저히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집단이다. 아이시스는 군사적 저항에 성공하며 성장했지만 종파적 성격 때문에 제국주의를 물리치지는 못한다. 아이시스는 그것을 낳은 환경, 즉 미국이 이끈 이라크 전쟁·점령과 시리아 정권의 반혁명 of 거울 이미지이다.

서방 제국주의가 낳은 공포는 아이시스가 낳은 공포와는 차원이 달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서방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과 경제제재로 이라크인 2백만 명이 죽었다.

2004년 미국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피부에 달라붙어 살을 태우는) 화학무기 백린을 사용해 이라크 도시 팔루자를 공격했고 민

간인들을 고문했다.

이라크 전역에서 일어난 저항 운동을 분쇄하려고 미국은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를 이간질했다.

미국은 종파적인 시아파 정치인들을 후원했고, 그들은 정실주의와 부패를 이용해 빠르게 권력을 굳혔다.

이것이 아이시스의 전신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가 성장할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같은 저항 세력 이어도 종파가 다르면 공격했고, 이 때문에 다른 수니파 조직들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와 거리를 뒀다. 그러자 미국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를 격퇴하면, 그 대가로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수니파 단체들에 약속했다.

이후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이라크에서 약화됐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니파를 이라크 정치에서 배제했다.

이런 종파적 갈등을 극복할 기회가 있었다. 아랍 혁명의 물결이 이라크에 닿았다. 2012년 '이라크의 봄'이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반혁명이 전진하며 혁명적 대안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이라크에서는 세력이 약화됐지만, 시리아로 건너가 전열을 가다듬었다.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은 종파적 내전을 일으켰고, 그 틈에 아이시스는 반정부군에서 유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고, 다시 이라크로 건너가 세력을 넓혔다.

아이시스는 파시스트 운동인가?

파시즘은 다양한 "프터부르주아"(소자본가들)를 기반으로 한 대중운동으로 노동계급의 전투성 파괴를 목표로 한다.

유럽에서 파시스트 운동은 1918년 이후 유럽을 휩쓴 노동자 혁명에 대응해 일어났다.

영국 노동당 의원 힐러리 벤은 "우리"가 "파시스트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랑스 우파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레비도 시리아

개입을 지지하며 아이시스를 "제3세대 파시즘"이라고 불렀다.(그가 말한 1세대는 히틀러의 나치, 2세대는 '공산주의'였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폭력적이고 반동적이지만 파시스트는 아니다. 아이시스는 노동계급을 파괴하기 위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건설하려 애쓰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의 파시즘 운운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전쟁 지지 여론을 끌어내려고 종종 "새로운 히틀러", 파시즘 같은 말을 들먹인다.

아이시스는 시리아 내전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한 무장조직이다. 아이시스는 무장 단체를 보유한 정치운동을 표방하기보다 는, 국가를 자처하는 군대로서 움직인다.

이런 맥락은 유럽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떠올랐던 때와도, 오늘날 파시스트들이 활동하는 맥락과도 다르다.

이라크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전쟁과 경제제재와 점령이 아이시스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 기간 동안 이라크 사회는 완전히 파괴됐고, 시리아 사회는 내전 때문에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제국주의 옹호자들은 원칙에 있는 파시스트 반대자도 아니다. 그들의 의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왜 영국 지배자들은 시리아 폭격에 그토록 열을 올리나?

영국 제국이 몰락한 이래 영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국제적 위상을 지키려 애썼다.

영국은 2013년 국회에서 시리아 공습안이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그때부터 영국 정부는 어떻게든 자신의 제국주의적 위상을 세우고 세계 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시리아와 레바논이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던 19세기부터 이곳에 눈독을 들여 왔다.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오토만 제국이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1916년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메소포타미아를 나눠 가졌다. 이 협정을 통해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지배하게 됐고 영국은 팔레스타인·이라크·요르단을 점령했다. 하지만 중동 지도를 펴 놓고 프랑스와 흥정할 때조차도 영국 관료들은 아랍 족장들을 부추겨 오토만 제국에 맞서 싸우게 했다.

1920년 프랑스 군은 아랍인 왕 파이잘 알라시미의 시리아 독립 시도를 분쇄했는데, 그 뒤 영국은 서둘러 파이잘을 이라크 바그다드로 보내 이라크 왕으로 만들었다.

현재 영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소규모 공공이 시리아 전황에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뛰어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지배자들에게 영국이 쓸모있음을 입증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이시스가 너무 야만적이어서 폭격하는 것이라면,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폭격 대상이 되지 않는가?

아이시스는 반대자들을 참수하고, 여성을 전대하고, 공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행위를 벌이며 자신이 지배하는 대중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다.

지배자들은 아이시스가 이처럼 야만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폭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이시스가 저지르는 야만 중 많은 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벌

어진다.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 독재정권이 서방의 동맹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지하드 세력 중 최소 몇 개는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국 이란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사우디아라비

아와 매우 가까운 동맹이다. 이것만 봐도 서방 국가들이 중동의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이 죄다 위선임을 알 수 있다.

서방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하자, 안정적인 석유 공급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연안국

▶ 9면으로 이어짐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서방 정치인들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라는 반동적 집단이 제기하는 "파시스트적" 위협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아이시스 등장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폭격은 서방 제국주의가 일으킨 혼란을 더 격화시키기만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 8면에서 이어짐

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중 하나로 발돋웠다. 이 나라들은 엄청난 돈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른 중동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카타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은 반혁명의 보루 구실을 해 왔다. 그들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란을 짓밟고 독재 정권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돕는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누구인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2000년에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에게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그가 이끄는 바트당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몰아낸 급진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바트당은 시리아가 근대적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기를 원했던 중간계급 분파를 대표했다.

바트당은 196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바트당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반제국주의의 연사와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 지지를 가미했다. 중동 지역에서 서방의 경비전 구실을 하는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6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일환으로 시리아의 영토인 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이 패배에 더해 1970년 요르단에 대한 시리아의 군사 개입이 실패하자, 시리아에서 정치 위기가 발생했다.

그해에 벌어진 또 한 번의 쿠데타로 하페즈 알아사드는 중심으로 한 바트당 내 군부 세력이 권력을 틀어쥐게 됐다.

아사드 정권은 저항을 조금치도 용납하지 않는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는 이웃 나라 바레인에서 일어난 혁명을 파괴하고자 바레인을 침략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는 이집트의 독재자 압델 파타 엘시시의 반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시 집권 후 무려 2백억 달러(약 23조 원)가량을 지원했고, 올해 3월 1백20억 달러(약 14조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집트의 세입 규모는 총 8백억 달러 수준이다.)

서방이 이런 국가들을 폭격할 일은 한동안 없을 것이다.

극심한 탄압 정책을 펼쳤다. 1982년 하마 시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군부는 수만 명을 살육했다.

시리아 정권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91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걸프전)에서 미국 편을 들었다. 국가 탄압은 계속됐지만 서방은 2000년에 바샤르 알아사드가 집권하자 그를 개혁이라고 치켜세웠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사람들을 고문하는 일을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아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2005년 시리아는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를 암살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시리아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또, 미국은 시리아가 이라크의 저항 운동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시리아는 현재 러시아의 중동 지역 우방이다. 시리아 전쟁은 '아랍의 봄'에 따라 시리아를 휩쓸었던 진정된 대중 혁명에서 비롯했다.

아사드는 종파적 내전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통제권을 잃었다. 그러는 동안 결정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시리아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서방의 폭격이 쿠르드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방 강대국들은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쿠르드족의 처지를 이용해 왔다. 좌파들 중 일부도 아이시스에 맞서 서방이 쿠르드족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시리아에서 총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쿠르드 저항 단체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장기적 구실을 한다면, 오직 서방 제국주의만 득을 볼 것이다.

쿠르드족은 제국주의자들이 제1차세계대전 후 오토만 제국의 옛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주요 희생자 집단이다. 그들의 민족자결권은 부정됐고, 그 결과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흩어져 살게 됐다.

그때부터 쿠르드족은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투쟁을 지지한다. 아사드 정권은 내전을 벌이면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들을 포기했다.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에 가맹한 YPG 그룹(민중방위군)이 그 지역을 장악했고 지금은 아이시스로부터 그 지역들을 방어하기 위해 격

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전사들은 미국에게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여름 터키 전투기가 쿠르드족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불평했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의 처지에서는 쿠르드족의 힘이 커지는 것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

터키는 지난 10년 동안 쿠르드족 분리 독립주의자들에 맞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터키는 쿠르드족의 자치나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

미국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큼은 강하지만, 터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강하지는 않도록 하여 세웠다.

쿠르드족은 1백 년 전처럼 또다시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중동 지역 지배계급들이 벌이는 책략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출처 영국 반제국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83호 번역 전문기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김영익

신문이나 방송의 국제 소식을 보면, 강대국들의 시리아 폭격,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분쟁 소식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곤 한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찬미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세계가 자유 무역 질서 하에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은 과거지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크게 의존하는데도, 지난해 나토 NATO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의 수혜를 입어 역동적으로 성장해 온 동아시아에서도 지금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이 약소국 시리아를 유린하는 모습까지 보면, '제국주의'는 명백히 현실이다.

정의

따라서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국주의'라 하면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제국주의에는 이런 개념도 함축돼 있다. 그러나 레닌·부하린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했다. 이 경쟁은 경제적 형태뿐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형태도 띄며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 제국주의의 핵심은 명백히 강대국들 사이의 지배권 다툼에 있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자본주의 하에서 제국주의는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경제적 경쟁은 자본주의에서 이윤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다. 자본가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분열돼 있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뒤처지면 바로 경쟁 기업들에 패배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축적을 해야 한다. 즉, 이윤을 계속 재투자해야 한다.

지정학적 경쟁은 영토·권력·영향력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경쟁을 가리킨다. 국가들은 이 경쟁에서 외교력을 동원하고, 국단적으로는 무력 충돌도 감행한다. 물론 지정학적 경쟁은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경쟁 논리에 통합됐다. 세계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시장·원료·투자처 등을 놓고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했다. 기업들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신들의 국가에 의존

했다. 국가들도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국 자본에게 의존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운송수단 등을 생산하려면 자본주의적 산업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융합되기에 이르렀다.

시대

물론 자본주의에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확보 경쟁을 벌이며 전 세계를 분할했다. 당시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제조업이 발전했다. 영국 해군은 영국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줬다. 그러나 점차 영국은 경제적·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20세기 초 독일과 미국 모두 산업 생산 면에서 영국을 앞질렀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갖추게 됐다. 영국에 대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이 거세게 제기된 것이 두 차례 세계대전이 벌어진 근근 원인이었다.

양차 대전이 끝나고 점차 유럽의 식민지 체제는 와해됐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계속 치열했다. 핵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였다.

양대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지면 상대가 자신의 경제적·지정학적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경쟁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군비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 때문에 제3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땅에서 힘을 겨룬 대표적 사례였다.

불균등 발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이렇듯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에 대해 과거부터 강력한 이견이 제기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 독일인 회민당당의 지도자였던 카를 카우츠키가 내놓은 '초제국주의론'이 있었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 전체가 제국주의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했다. 그는 제국주의를 특정 자본가 집단 — 예컨대 군수물론 지정학적 경쟁은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경쟁 논리에 통합됐다. 세계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시장·원료·투자처 등을 놓고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했다. 기업들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신들의 국가에 의존했다. 국가들도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기기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날드 있는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말도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레닌은 자본주의가 불균등하게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나라는 앞서고 다른 나라는 뒤쳐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모종의 위계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때문에 경제력의 상대적 분포가 바뀐다. 그러면 국가들 사이의 서열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들은 저물어 가는 기존 강대국들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 들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그래서 레닌이 보기에, 국가들 사이의 협약이나 동맹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모두 “전쟁과 전쟁 사이의 하나의 ‘휴전’”일 뿐이었다.

오늘날 세계경제도 레닌이 지적한 “불균등성과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 그래서 레닌의 통찰은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잘못된 제국주의 개념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많은 좌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을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국주의 개념을 서방 자본가들의 제3세계 착취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다.

오늘날에도 제국주의를 ‘미국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의 제3세계 수탈’로만 여기는 좌파가 많다. 그래서 제국주의 체제에 맞선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니라 흔히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족 구성원 다수의 이익에 맞게 국가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좌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3세계에서 실제 착취 과정을 수행하는 게 현지 자본가와 정부라는 점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때 ‘자립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제3세계 국가들이 오늘날에 다국적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단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음모와 협박 때문만은 아니었다.(물론 협박은 있었다.) 무엇보다 제3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였다.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들과 협력하고 투자를 유치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자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겼다.(물론 현지 자본가 계급의 동역학과 제국주의 이해관계의 동역학이 언제나 일

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좌파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고무해 자국 지배계급의 일부에 맞서 투쟁하게 만드는 한편, 착취자와 피착취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민족 이익을 중시했다. 그래서 좌파 민족주의는 노동자·농민 등의 분노를 자본주의 틀 안에 한정시키는 약점을 드러냈다.

진영 논리

일부 좌파들은 서방의 리비아·시리아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시리아 아사드 정권 등을 반제국주의 정권이라고 옹호한다. 시리아 독재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압박하게 다뤘다는 점은 간과된다.

이런 주장들에는 종종 ‘진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진영 논리’란 ‘모종의 진보적인 국가들이 있고 제국주의에 대한 평형주로서 그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대개 미국을 가리킨다. 즉, 제국주의를 체제로 보지 않고 미국 같은 특정 국가의 지배로 환원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실에서 ‘진영 논리’는 흔히 러시아와 중국을 편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진영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의 공세만을 비판할 뿐, 러시아의 무력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제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내적 동력을 봐야 한다.

사진 출처 <http://www.war.com>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공세를 주되게 문제 삼을 뿐, 중국의 지정학적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아예 침묵한다. 일부 좌파들은 지난해 홍콩 우산 운동을 미국이 조종한 “색깔 혁명”이라고 여겨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다수의 국가들이 경쟁하는 체제다. 따라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러시아·중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체제 전체가 우리의 적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미군

제국주의 하에서 세계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거의 없게 됐다.

오늘날 제국주의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위는 장기간에 걸쳐 점차 하락해 온 반면, 다른 경쟁국들은 상대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은 군사력 면에서 여전히 우월하지만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모순을 겪어 왔다. 1945년 세계 생산의 절반이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그 수치는 20퍼센트 남짓이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의 약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등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됐다.

경제 성장의 차이가 생기자,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군사력 격차도 점차 좁혀져 왔다. 특히 중국은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매우 빠르게

키우고 있다. 경제력의 상대적 분포가 달라지면서 지정학적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갈등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현재 미국한테는 중국의 부상을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오르자 국제관계의 기존 패턴이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미국은 이전보다 자국의 동맹국들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자국 주변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태평양 서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중국의 처지에서 이것은 미국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일 테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미국의 해계모니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애써 왔다. 이런 전략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세계 1위·2위·3위의 경제 대국들이 공공연하게 적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딜레마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국이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지키려면 유럽·동아시아·중동 모두에서 해계모니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력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미국의 힘으로 세 지역의 도전에 모두 대응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동아시아에 역량을 집중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싶어 하지만, 중동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바마는 중동의 지역 강국들을 분열 지배해 미국의 해계모니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 전략은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 패권이 흔들린다면, 미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시리아·이라크 등지에서 발을 빼고(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더 깊숙이 개입할수록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하고 파리 공격으로 유럽 국가들이 더한층 시리아에 얽히면서, 미

국은 중동 전쟁에 계속 발을 담그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물론 오늘날 제국주의 간 경쟁이 조만간 제국주의 간 전면전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지금도 제국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보여 줬듯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불안정 요인이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정학적 질서에 앞으로 어떤 불안정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따라 제국주의를 이해한다면, 한 가지 명확한 정치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민족의 투쟁이 제국주의 체제를 쓰러뜨릴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다.

스페인 총선 결과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김준효

12월 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그간 긴축을 추진해 온 우파 여당 국민당(PP)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제1야당 사회당(PSOE)에 대한 지지가 전례 없이 추락했다. 두 당은 프랑코 군부 독재가 종식된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스페인 주류 정치를 지배해 왔다.

국민당은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약 28퍼센트(약 7백20만 표)의 지지로 1백23석을 획득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총선에 비해 4백만 표(약 16퍼센트포인트, 의석 63석) 가까이 줄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13퍼센트(약 3백50만 표)의 지지를 얻어 4위를 한(40석 획득) 신생 우파 정당 시우다다노스(‘시민’이라는 뜻)와 연정해도 국민당은 내각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사회당은 22퍼센트(약 5백50만 표)의 지지로 90석을 얻었는데, 이는 사회당이 선거에 출마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2008년에 1천1백만여 표를 얻고 집권했을 때에 비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고, 2011년에 비해도 약 1백50만 표가 줄어든 것이다.

국민당과 사회당 두 당의 지지율 합이 70퍼센트 이하로 내려간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창당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신생 좌파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는 2위인 사회당과 1퍼센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21퍼센트(약 5백 20만 표)의 지지로 69석을 획득했다.

포데모스는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포데모스가 주도한 선거연합이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에서 1위를 했고, 포데모스가 단독 출마한 수도 마드리드 시를 비롯해 국민당 강세 지역인 발렌시아, 갈리시아, 나바라 주,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도 2위를 했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온건 좌파 선거연합 카탈루냐공화좌파(ERC)와 민주주의와자유(DiL)도 포함 1백20만 표 가까이 득표해 17석을 얻었다. 도시 지역에 불리한 스페인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에 의석은 2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IU)도 90만 표 이상 득표했다. 이들의 득표와 포데모스의 득표를 모두 합치면 국민당이 얻은 표보다도 많아, 좌파들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이 분명해진다.

긴축과 반긴축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신흥공업국의 성장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던 스페인 경제가 2008년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거의 4년 동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 27퍼센트까지 올라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둘째로 높았으며, 청년실업률은 51.5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사회당과 국민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GDP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회



“빵, 일자리, 집을 모두에게” 2014년 3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존엄을 위한 행진”에 2백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대중 운동이 정치적 급진화의 배경이 됐다.

복됐지만, 이는 두 당이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복지를 삭감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친 결과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세 차례의 하루 총파업과, 반부패·반긴축 대규모 거리 항의 운동(‘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벌어졌다.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주류 양당은 신생 정당들의 도전을 받았다. ‘분노한 사람들’ 운동에 힘입어 등장한 포데모스는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백만 표를 넘게 득표하며 왼쪽에서 도전했고, 스페인 국가주의를 내세운 시우다다노스는 반부패 슬로건을 내걸고 오른쪽에서 도전했다. 주류 양당과 스페인 왕실의 계속되는 부패 추문 때문에 반부패 정서가 확산된 것도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줬다.

한편,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카탈루냐 독립 쟁점도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퍼센트가 거주하는 카탈루냐 지방은, 민족적·문화적으로로는 차별받아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스페인 GDP의 2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지방이다.

카탈루냐 독립 지지 세력은 대중적 거리 항의 시위를 벌이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독립 지지 여론을 키워 나갔다. 카탈루냐 독립에 우려를 느낀 국민당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지방정부 사이에 긴장이 심화됐다.

이 긴장 때문에 독립 지지 여부를 묻는 카탈루냐 지방 주민투표는 2014년 11월에 비공식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주민의 40퍼센트 가까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독립 지지가 80퍼센트에 이르렀다. 한편 2015년 11월 카탈루냐 지방의회에서는 ‘2017년까지 독립’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포데모스

포데모스는 개혁의 염원을 정치적 대안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주로 사회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장했다.

명성이 드높은 청년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이끄는 포데모스는 국가부채 탕감, 은행 재국유화, 기본 소득 제공, 연금 삭감 없는 정년 단축 등 여러 급진적 공약을 내세우며 선풍적 인기를 얻었고, 2014년 11월 여론조사에서는 28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분노한 사람들’ 운동에서 비롯한 ‘지역 서클’ 운동과 좌파 단체들이 포데모스에 참여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와 여러 좌파들은,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5대 도시 중 4개 도시에서 지방정부에 입성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1백33명 배출하는 등 중요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카탈루냐에서는 급진적 반자본주의 선거연

합 민중연합(CUP)이 9월 지방선거에서 10석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전 몇 달간 포데모스의 행보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포데모스 지도부는 좌우 대립은 구시대적 기준이고 “카스트(정치 엘리트) 대 민중” 사이의 대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포퓰리즘 정치에 따라 포데모스 지도부는 오른쪽 지지층을 늘려 “판의 중심을 장악”(이글레시아스)하려 했다.

포데모스 지도부는 애초에 내걸었던 급진적 경제 공약을 대거 수정·삭감하고 “복합적 사회민주주의” 공약을 도입했다. 스페인 국가주의 지지자를 포용하기 위해 리비아 공습을 지지한 육군 장성 홀리오 로드리게스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당 내에서 좌파들이 이런 우경적 동요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까 봐 이를 어렵게 만들려고 매우 중앙집권적인 정당 구조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동요 때문에 포데모스는 반부패를 표방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의 도전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한때 사회당을 뛰어넘었던 지지율이 추월당하기도 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당의 중요한 기반인 ‘지역 서클’ 운동과 사실상 분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포데모스는 10월 이후 개혁을 염원하는 청중들 사이에서 지지율을 (지난해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반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첫째, 주34시간 노동제 도입, 공공부문 임금 대폭 인상 등 그간 주장하기 삼갔던 개혁 과제 중 일부를 다시 공약으로 부각한 덕이었다.

둘째, 카탈루냐·발렌시아·갈리시아 등 포데모스가 높은 성적을 거둔 몇몇 지방에서 포데모스는 다른 좌파 세력들과 함께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출마했다.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민중연합(CUP)이 총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좌파적 표가 포데모스로 몰린 것도 영향을 줬다.

셋째, 포데모스의 거리 유세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한껏 표현하는 거리 행진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집회들은 개혁 염원 정서가 여전히 포데모스를 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불안정성

국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왼쪽 세력들이 국민당·시우다다노스 등 오른쪽 세력들보다 표를 더 많이 얻어 연정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포데모스는 선거 기간 내내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 (연정이 아닌) 조건부 협력을 할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합은 카탈루냐 독립 쟁점을 두고 홍역을 치를 수 있다. 사회당은 강경한 스페인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반면, 포데모스는 전국 정당 중 유일하게 카탈루냐 독립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정당이다(그렇다고 독립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 연합으로 정부를 운영하려면 카탈루냐 독립 지지 선거연합 세력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사회당의 스페인 국가주의 때문에 여기서도 긴장이 빚어질 수 있다.

스페인 헌법은 총선 후 새 정부 구성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호한 상황은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일부 서방 언론들은 연정 구성에 완전히 실패해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은 사회당 주도로 어찌어찌 연정이 구성되면 스페인 정치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포데모스 등 좌파의 약진으로 표현된 변화 염원이 제도 정치 내에서 소모되지 않고 진정한 저항으로 발전하게 하려면, 급진좌파들은 포데모스의 선거 승리를 환영하면서도 독립적 정치에 기초해 운동을 전진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에서 오랜 양당 구도를 깨뜨리며 성장한 포데모스.

엔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정진희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엔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이렇게 여성 차별을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기메네즈와 보겔, 페데리치는 마르크스의 방법은 유용하지만 마르크스 자신은 여성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브라운은 마르크스가 비록 여성 차

별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본다.

브라운은 2012년에 발간된 《마르크스의 젠더와 가족》에서 마르크스가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구실과 가족에 관해 쓴 것을 모두 살펴보면서 이를 입증한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 차별에 관한 마르크스의 저술들을 소개한 이 책은 여성 해방이 마르크스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끔 돕는다.

그러나 브라운은 가족과 여성 차별을 다룬 핵심적인 마르크스주의 고전인 프리드리히 엔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하 《기원》)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기메네즈, 보겔, 페데리치도 이 점에서 비슷하다.

경제결정론?

브라운은 엔겔스가 억압을 단지 '경제적 요인'으로만 이해해 경제결정론과 환원론에 빠진 반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더 변증법적이어서 더 많은 갈등과 다양성을 허용하며 억압을 정교하게 설명한다고 본다.

이 주장의 원조는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라야 두나예프스카야다. 두나예프스카야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주의와 단절한 공산주의자 세대에 속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생산력 발전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 변혁을 낳는다는 기계적 결정론을 취하며 역사에서 인간들이 수행하는 능동적 구실을 기각했다. 두나예프스카야는 이에 반발해 마르크스의 저작들에 주목하며 다시 해방의 전망을 찾으려 했다.

두나예프스카야는 브라운처럼 마르크스의 “민속학 노트”를 연구하고 1979년에 쓴 글에서 “민속학 노트”를 엔겔스의 《기원》과 비교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인간 행위를 역사의 원동력으로 보는 데 반해 엔겔스는 단지 역사의 “단계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헤더 브라운

브라운과 두나예프스카야는 마르크스의 “민속학 노트”가 엔겔스의《기원》과 달리, 원시 공산주의 내에서 생겨난 여성 차별의 요소들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엔겔스가 사용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는 구절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엔겔스의 책은 마르크스의 노트와 많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엔겔스를 기계적 유물론자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엔겔스는 생산력 발전과 사회적 관계 사이가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항상 투쟁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엔겔스는 “정치·법률·철학·종

교·문학·예술 등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고 경제적 토대에도 반작용합니다. 경제 상황만이 원인이고 유일하게 능동적인 반면 다른 모든 것은 수동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필연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상호작용이 이뤄[집니다]” 하고 썼다(1894년 1월 25일 슈타르켄부르크에게 보낸 편지).

역사유물론과 변증법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청년기 이후 평생에 걸친 긴밀한 협력 속에서 발전시킨 이론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엔겔스를 분리해 변증법적 마르크스 대 ‘기계적’ 엔겔스로 서술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브라운은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소개할 때 종종 마르크스의 견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해석한다. 브라운은 요즘 유행하는 ‘상호교차성’ 개념, 즉 계급을 여성, 인종, 성 같은 요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논리로 마르크스의 저작을 해석하곤 한다. 예를 들어, 브라운은 여성의 자살과 이혼 문제를 다룬 마르크스의 기사들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마르크스는 적어도 단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계급과 젠더 어느 하나를 특권화하지 않고 분석하면서 이 둘의 상호의존관계를 논했다.”

브라운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성과 계급 억압에 관한 통합적 이론을 만드는 데” 엔겔스보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더 유효하다고 본다(브라운은 계급 문제를 착취가 아닌 억압의 문제로 국한해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 마르크스는 여성 차별을 노동 계급이 겪는 착취나 차별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았다(이 점은 엔겔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성 차별을 논할 때 마르크스는 분명히 계급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바탕을 뒀다. 그는 여성 차별, 가족, 종교 분쟁 같은 다양한 쟁점을 계급 사회의 특유한 산물로 이해했고, 마르크스가 계급 사회에서 근본 대립을 성이 아니라 계급으로 여겼



남아프리카의 산(San)족 많은 인류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들과 이런 소규모 부족사회를 연구해 초기 인류 사회에 체계적인 여성 차별은 없었음을 보여 줬다.

는 것은 무수한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은 마르크스의 방법을 이용해 여성 차별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도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인 계급투쟁 사상을 여성 해방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브라운이 옛 소련과 동유럽, 중국 같은 나라들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스탈린주의

스탈린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여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 사회에서 지속되는 여성 차별을 보며 흔히 계급 사회 폐지와 여성 해방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급진 페미니즘에서 유래한 가부장제 개념을 수용해 이중체제 이

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체제는 결코 계급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었고, 러시아를 제외하자면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 혁명조차 일어난 적 없었던 사회였다.(중국에서는 1949년 민족 해방 혁명이 일어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수립됐다.) 스탈린주의 체제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분석한 국제사회주의 전통에서는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진행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브라운은 가부장제의 정의를 결코 밝히지 않은 채 자본주의에서 가부장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엔겔스와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형태의 가부장제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추측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봉건제의 농민 가족 등과 같이 전 자본주

의 시대의 가족을 묘사할 때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등장하면 자본 축적 동학 때문에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제도들과 기존 사회관계가 고스란히 유지될 수 없고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노동력 재생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학에 재생산이 종속된다고 여겼다.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 의식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도전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노동계급 가족을 가부장적 가족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충격으로 노동계급 가족이 사실상 해체 상태에 놓인 것을 보았고, 장차 노동계급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다.



잠재력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끝장냄으로써 착취와 여성 차별을 끝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기원》은 계급과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의 기원을 밝힌 책으로 엥겔스가 마르크스 사망 1년 뒤인 1884년에 썼다. 엥겔스는 자신의 노트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민속학 노트”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북미 원주민 부족인 이로쿼이족을 연구한 미국 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의 선구적 연구 《고대 사회》를 높이 평가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통찰력에 바탕을 두고 모건의 작업을 계급 사회의 등장이 어떻게 가족제도과 그에 따른 여성 차별을 낳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주류 학계는 오랫동안 모건의 저작을 무시했고, 마찬가지로 엥겔스의 저작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모건의 연구는 그 뒤 발전한 인류학 연구에서 여러 오류가 지적됐다.

그러나 주류 학계가 모건과 엥겔스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사실적 오류보다는 그들이 사용한 유물론적 방법에 담긴 혁명적 함축 때문이었다. 계급과 착취, 억압이 없는 ‘원시 공산주의’가 존재했다는 생각은 동화로 취급됐다. 그런데 브라운 역시 엥겔스가 계급 이전 사회를 이상화했다며 ‘원시 공산주의’가 존재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러나 인류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이뤄진 많은 연구들은 착취와 체계적 차별이 없는 사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초기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채취나 수렵을 하며 살아갔다. 이 수렵-채집 사회들은 “토지와 자원의 집단 또는 공동 소유, 식료품 분배에서 일반화된 호혜주의,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정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리처드 리).

《기원》에서 엥겔스는 인간 사회의 폭넓은 발전을 묘사하기 위해 “야만”, “미개”, “문명” 같은 모건의 개념을 사용했다. ‘야만’은 수렵-채집 사회를 뜻

하고, ‘미개’는 원예농업에 기반을 둔 초기 농업 사회를 뜻하고, ‘문명’은 계급 사회를 뜻한다. 엥겔스는 각각의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결혼 형태를 발견했다. 즉, 수렵-채집자들의 군혼, 원예 사회의 대우혼(두 사람이 짝을 이루지만 언제라도 한쪽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관계), 계급 사회의 일부일처제(어머니가 중심인 오랜 친족 구조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지배하는 가족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엥겔스는 《기원》에서 계급 발생 전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고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대립은 단혼에서 남녀 대립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의 여성 억압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옳았다. 엘리너 리콕, 리처드 리 등 여러 인류학자들이 수집한 증거를 보면, 17~19세기에 유럽 이주민이 만난 수렵-채집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일이 없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성별 노동 분업은 있었다. 남성은 주로 수렵을 맡았고 여성은 주로 채집을 맡았다. 그러나 이런 분업이 꼭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당시 사회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채집은 수렵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했다. 여성은 공동체에 필요한 사항들을 남성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들은 가족 단위로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친족 공동체 체계에서 살았고 양육은 공동체 모두가 책임졌다. 부부 단위도 느슨하게 조직됐다. 배우자가 떠나도 자신이나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가치관은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매우 달랐다.

몇 가지 오류와 한계

엥겔스의 기본 명제는 옳지만, 부차적 문제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우선, 엥겔스는 대다수 수렵-채취 사회에서 혈통이 하는 구실을 매우 과장했다. 모건은 혈통에 기반한 사회들에 있는 친척 분류를 그 이전의 상당히 다른 사회 조직 형태에 적용했다. 엥겔스는 이 친척 분류가 형제들이 자매들과 결혼하는 “군혼” 단계를 입증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혼이 “야만의 특징”인 반면, 대우혼은 “미개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혼은 물론 강력한 혈족도 수렵-채집 사회(‘야만’)의 특징이 아니다. 이 사회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느슨하게 무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군혼 이전에 “무규율적 성교”의 시기가 있었다고 추정한 것은 별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

또 다른 쟁점은 엥겔스의 실제 오류가 아니라 종종 엥겔스의 옹호자들과 반대자 모두가 엥겔스의 잘못으로 돌리는 문제다. ‘모권제’라는 용어를 쓴 사람들은 흔히 계급 지배와 국가 비슷한 게 항상 존재했고 한때 사회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지배했다고 가정했다.

엥겔스는 ‘모권’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후손이 모계를 따르는 것을 가리켜 독일의 저술가 바호펜이 사용한 ‘모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엥겔스는 ‘모권’이 어떤 단계에

서는 보편적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직 이 사회 단계에서는 법적 의미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권’이]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봤다.

군혼, 모권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시대에는 수렵-채집 사회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수렵-채집 사회들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모건의 저작은 초기 농업 사회인 원예 사회들에 관한 자료들이었고, 그래서 엥겔스는 수렵-채집 사회에 관해 추측해야 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진화에서 평등주의적 국면을 설정한 것은 옳았다. 게다가 엥겔스는 변증법적 사상이가로서 생산력의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예 사회의 씨족 공동체의 평등한 관계를 허물어뜨려 계급들이 등장할 것임을 이해했다.

엥겔스는 계급 발생과 사유재산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후대에 이뤄진 많은 연구를 볼 때 이것이 일반적 추세는 아니었다. 어떤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 발생 한참 뒤에야 사유재산이 형성됐다.

그런데 엥겔스는 계급 사회의 등장과 여성의 지위 하락(“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을 옳게 관련짓지만, 새로운 계급 사회에서 지배자들이 하필이면

왜 남성이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이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와 인류학자 어니스틴 프리들이 제시한 설명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한 설명이 설득력 있다.

수렵-채취 사회에서 중요한 식량 조달 수단이었던 채취는 아이를 기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팽이에 의존한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사회에서는 더는 그럴 수 없었다. 여성이 그런 일을 했던 사회는 출산율이 낮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회는 여성을 그런 업무에서 배제하는 다른 사회에 밀려났다.

농업에서 일어난 변화뿐 아니라 장거리 무역의 발전과 빈번해진 전쟁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일들은 남성이 주로 수행했기에 여성은 가장 많은 잉여를 창출하고 사회적 위신을 높이는 분야에서 제외됐다.

결국 최초의 지배계급은 남성들이 됐다(그러나 모든 남성이 아니라 소수의 남성만이 지배계급이 됐다). 그리고 계급과 국가가 발전하면서 부계제(자손이 부계를 따르며 복잡한 친족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가 남성 연장자가 가구를 지배하는 가부장제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결론

기메네즈는 먼 과거에서 억압의 기원을 찾는 것은 비마르크스주의적이라며 역사가 아니라 구조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차별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사변적 시도가 아니라 여성 해방을 위한 이론과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엥겔스의 《기원》에 몇몇 약점이 있지만, 이 책은 여성 차별을 유물론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오늘날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전망을 밝히며 전략을 제시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착취와 여성 차별이 모종의 인간 본성이 아니라 계급 사회의 등장에 물질적 뿌리가 있다는 유물론적 분석은 계급 사회가 철폐된다면, 착취와 함께 여성 차별도 끝장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엥겔스의 이 책은 자본주의에서 여성 차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에서 여성 차별이 일어나는 방식이나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 맺는 관계를 이 책을 통해 파악할 수는 없다(이 책의 목적도 아니다).

엥겔스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일부일처제를 비판하며, 사회주의에서는 진정한 일부일처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봤다. 엥겔스가 진정한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 것은 놀랍지만, 자신의 견해이자 순전한 추측이었을 뿐 자기 이론의 필연적 결론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엥겔스의 진정한 요점은 다음의 유명한 단락에 담겨 있다.

유물론

“앞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지양한 뒤 자리 잡을 양성 관계의 형태에 대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들, 대부분 소멸하게 될 것들이다. 그러나 새로 나타나게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남녀의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남자는 일생을 두고 금전이나 기타 사회적 권력 수단으로 여자를 사는 일이 없고, 여자는 진정한 사랑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동기로도 결코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며,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거

부하지 않을 때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할 때면 지금의 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들은 조금도 애매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 것이며, 또 이에 따라서 각자의 행동에 관한 여론을 스스로 조성할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개인들의 성적 관계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형태가 다양할 것은 분명하며(이미 지금도 다양하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 같은 계급 사회가 인간 본성의 산물이고 착취와 억압이 영원하다는 관념에 도전해야 한다. 《기원》은 이에 필수적인 무기 중 하나다.

※ 전문은 웹사이트를 보시오.

※ 정진화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책갈피, 2015)의 역언이다.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픈 직장 순위 3위가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그런데 3년간 이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나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먼지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각종 오물과 세제가 두 손과 눈·입 등으로 여기저기 튈다. 물 청소를 하다 보면 작업복이 젖어 온 몸에 땀과 물과 퀴퀴한 냄새가 뒤엉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청소 노동자들은 마땅히 설 곳을 찾기가 어렵다. 변변한 샤워장이나 화장실도 마련되지 않은 공장·부서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운이 좋아 냄새 나는 화장실 한 칸에 공간을 마련해 사용하는 동료들도 있다.

나는 씻고 싶었다. 피곤한 몸을 쉬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단 나만이겠는가.

1년이 넘게 휴게실을 마련해 달라고



남자 화장실 안에 한 칸 있는 여자 화장실 지독하게도 여성차별적인 기아차 공장.

원청과 업체 관리자에게 호소를 해 봤지만, ‘여태껏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줄 공간도 예산도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지난해 매출액이 5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아차에서 말이다!

나는 지난달 초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성 노동자들에게 휴게실과 샤워장, 화장실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대자보를 기아차 화성공장 곳곳에 부착했다.

코웃음을 치던 원청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그것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내가 속한 업체에 압박을 가했다. 사측에 영향을 받는 일부 노동자가 내가 쓴 대자보를 찢기도 했고, 반장은 ‘시끄럽게 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여자’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악의적인 서명을 받기도 했다.

12월 초에는 원청 관리자가 나와 내 동료에게 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일반직 여성직원 휴게실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 여성직원이 나 때문에 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문제를 여성직원과 나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아쉽게도 분회 간부는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요구를 자제하라는 식으로 대했고, 한 좌파 활동가는 ‘지지가 많지 않으니 적당히 끝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은 내가 쓴 대자보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보내 줬다.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해 주고 대자보를 같이 붙여 주기도 했다.

현장의 주요 좌파들이 모인 ‘현장공동투쟁’이 리플릿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고, 몇몇 현장 모임들이 독자 리플릿과 대자보를 내기도 했다.

이런 속에서 최근 지회 집행부는 자신이 책임지고 전 공장 실사를 통해 여성 휴게실과 화장실, 샤워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와 내 동료의 휴게실도 3개월 내에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이런 약속이 이행된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비난과 압박 속에서 나는 때로 목이 메어오고 울분이 터져 나오고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에서 동지들과 함께 토론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동지들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도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휴게실 마련이 아니라, 또 일반직 여직원과 나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기아차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로 제기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사업부, 업체를 뛰어넘어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러 탄압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을 함께해 나가리라 다짐해 본다.

김경숙 기아차부 화성 새내차청분회 조합원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얼마 전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을 걸어 왔다. 그는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상경 투쟁에서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이 주요 요구 중 하나였고, 적잖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내국인 고용을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다른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고용 불안의 책임을 정부와 사장들에게 물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플릿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줬다. 그는 우리 주장이 속 시원했으며 우리가 굴하지 않고 원칙 있는 주장을 하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중동포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수도권의 토목 노동자다. 얼마 전 자신의 현장에서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단속반이 식당으로 들어 닥쳤다고 한다.

“단속반은 밥을 먹고 있는 재중동



손전등을 켜고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유심히 읽고 있는 건설 노동자.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1박2일 상경 투쟁에서.

포의 머리를 가격해 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폭력적으로 제압했다. 재중동포의 입에서 튀어나온 밥알들이 밥상 위에 나뉘어 있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단속반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나를 말했다. 괜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였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게 어찌 괜한 일이란 말인가. 그 재중동포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다.”

그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이냐” 하고 말했다.

그가 전해 준 경험은 진한 감동을 줬다. 지배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런 시도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맞서 싸우려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단단한 사회적 통념의 껍질을 송곳처럼 뚫고 나온 이 노동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

이창배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내다

지난달 중순 인하대학교 문과대 교수회가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폭로했다. 문과대 9개 학과 중 사학·중국언어문화학·한국어문학 등 3개 학과만을 유지하고, 프랑스언어문화학·철학 등 나머지 학과는 폐지하거나 소속 단과대를 옮긴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학과 통폐합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에만 수백 명의 문과대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쏟아냈고, 긴급하게 모인 학생회 대표자들은 총장에게 학과 구조조정의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일부 대표자들은 “총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가 문제이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 난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문과대 학생 간담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표자들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들은 “지금 학교가 계획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청년 실업의 원인을 개별 대학의 문제로 떠넘기는 ‘프라이م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의 일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총장의 확고한 구조조정 의사가 거듭 확인되자 문과대 학생 대표자들도 행동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의 학생이고 싶습니다(인문학)’라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문과대 학생뿐 아니라 타 단과대 학생과 교수·교직원들의 지지 메시지가

이를 만에 1천여 개나 모였다.

문과대 학생 대표자들은 11월 27일 학생 총투표를 발의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식 절차로 모아내고자 했다.

총투표에서 학생들은 94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구조조정 거부를 택했다.

문과대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최순자 총장의 극단적인 개혁안 당장 철회하라”, “PRIME 사업에 학생 팔기 중단하라”, “왜 희생이 필요한가요”라는 팻말을 들고 교내를 행진했다. 총장이 폐과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와 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생회장장과 문과대 학생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학교 본관 로비에 차려진 단식 농성장에 학생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고, 문과대 교수들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총장은 12월 17일 “철학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문과대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한다”는 답화문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에 반대한 학생들의 행동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물론 학교 당국이 또다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 이번 경험의 교훈을 살려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선희 인하대 학생

독자편지

2016년 1월 3일(일)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 마린 르펜

프랑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최근 데이브 수엘이 쓴 프랑스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재 프랑스 좌파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크게 공감합니다.

“극우를 격퇴하기 위해 우파를 지지하자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전략”이라는 말에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지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전략은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이 2002년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 이미 사용된 전략이다. 당시 혁명적 좌파들조차 우파 정당의 후보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부패하고 사악하고 인종차별적인 정치인의 기를 살려 줬을 뿐이고, 국민전선을 격퇴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었다.”

그런데 2012년 <레프트21> 93호(<노동자 연대>의 전신)에 실렸던 존 몰리뉴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선거 전술 가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시라크에게 투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의회 밖 대중 동원을 호소했다. 프랑스의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은 시라크에게 표를 던졌다. 당시 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방침을 지지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심중팔구 내가 틀렸던 것 같다.”

이 두 구절은 모순되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2002년 프랑스 선거에 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김중현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선거 전술에 대해 논의할 때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기차만 타도 쉽게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만큼 교류가 잦고 심리적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관련 문제를 다룰 동기, 전술을 결정하는 때 필요한 직접 경험과 대중 정서에 대한 직관이 풍부합니다.

반면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만한 경험, 직관,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 이러저러한 조건에서는 이러저러한 전술이 어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조차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질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프랑스 대선은 중도좌파 정당 사회당 주도의 연정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대중의 광범한 분노를 사던 상황에서 치러졌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외친 대안세계화 운동이 성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매우 낮았고, 우파 정당 공화국연합의 후보 자크 시라크, 사회당의 후보 리오넬 조스팽 모두 득표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극좌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회당 바깥 좌파의 득표를 합치면 국민전선의 득표보다 컸습니다. 또, 1차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프랑스 전역에서 국민전선 반대

집회와 거리 시위가 일어났고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운동은 1968년 반란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시스트가 4백 80만 표를 득표하며 결선에 진출한 상황에 혁명적 좌파가 조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르펜에 맞서 시라크를 지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당시 프랑스 상황은 대자본가와 지배계급이 파시즘에 권력을 넘겨줄 만큼 심각한 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 언론도 모두 달려들어 르펜을 공격했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시라크는 82퍼센트, 르펜은 18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그만큼 시라크의 승리는 처음부터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적 좌파까지 나서서 시라크를 지지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32년 히틀러

반대로, 당시 프랑스 상황이 파시즘이 집권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면 시라크 지지 입장은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1932년 히틀러를 막기 위해 ‘차악’인 힌덴부르크를 지지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힌덴부르크는 6개월 뒤에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시라크의 공화국연합도 우파의 승리를 위해 국민전선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둘째, 2002년에 프랑스 사회당은, 사회당을 비판하며 대선에 출마한 좌파들을 비난했습니다. 좌파들이 따로 출마하지 않았으면 국민전선이 아니라 사회당이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시라크 지지 입장은 이런 비난에 취약합니다. 이는 혁명적 좌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근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쭙든 선택지는 시라크나 르펜이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적인 노동자 상당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라크에 투표할 텐데, 시라크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채택하면 혁명적 좌파가 고립되는 것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존 몰리뉴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선거 전술 가이드’는 2011년 혁명으로 독재자 무바라크가 퇴진한 직후 이집트에서 치러진 2012년 5월 대선을 보며 쓴 글입니다. 당시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매우 급진적이었지만 경험이 적고 성마른 청년들의 압력을 받아 보이콧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이집트 판 개혁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1위, 무바라크 잔당 세력의 대표인 아흐마드 샤피크가 2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샤피크의 승리는 무바라크 체제의 복귀를 뜻하므로, 결선 투표에서 무르시에게 투표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군부와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무르시와 샤피크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이집트 대중

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를 몰아낸 정치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대중의 의식이 단박에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데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닙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도 그렇지만 대중은 여러 대안을 시험하며 점차 혁명가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집트 혁명가들은 이 점을 놓쳤습니다.

제가 보기에 몰리뉴가 이런 이집트 혁명가들의 실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다가 2002년 프랑스에 관한 입장까지 재고한 것은 너무 멀리 나아간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몰리뉴의 우려와 달리, 2002년 프랑스에서 혁명적 좌파는 시라크 지지 입장을 채택해야만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은 결선 투표에 참가해 시라크에 투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예견된 시라크의 승리에서 멈추지 말고 국민전선을 완전히 격퇴할 때까지 투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파시즘에 어떻게 맞서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는 우호적으로 논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승일 기자

※ 이 글의 전문은 온라인을 보시오.



독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는 질문과 의견을 남기는 공간이 각 기사 하단에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환영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wspaper.org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등 민간소비 확대 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바 있는데,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략적 의도도 담겨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재정 8조 원을 2016년 1사분기 내에 추가로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6조 원 증액, 국민연금의 국내 SOC·부동산 투자 10조 원 증액, 기업형 임대주택 5만 호 추가 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그린벨트 해제, 무역금융 20조 원 이상 확대, '규제 프리존' 설치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기업(특히 건설회사)을 지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말만 임대주택 정책

일 뿐 부지와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설회사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신당동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세는 전용면적 59m² 기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백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의 월세와 큰 차이가 없다. 노동자·서민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민영화에 길을 터 줄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3.9조 원), GTX-A(3.1조 원), 위례-신사선(1.4조 원) 등 전철 건설 사업에 민자를 끌어들이는 정책도 포함됐다. 민자사업은 높은 요금과 세금 지원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하는 데도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도 훼손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정책방향이 기업 지원에 맞춰지다 보니, 정부 주도의 산업



2016년에도 기업 지원과 노동자 공격을 예고한 지배자들.

구조조정은 1사분기 이후로 미뤄지는 듯하다. 조선·해운·철강 등 위험 산업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을 보면 말이다. 대신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도록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인수·합병 등의 과

정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법이다. 이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벌어지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도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올 5월에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의 생애 임금을 대폭 삭감하더니, 임금 억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공무원·공공기관·금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하는 임금 억제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을 확대하고, 일 반해고를 좀 더 쉽게 하는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화한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쟁의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탄압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위기에 빠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금 동결·삭감,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 감축 등은 계속 추진될 공산이 큰 것이다.

올 연말 노동 개악 입법과 가이드라인 추진에 맞선 투쟁을 발전시켜야, 내년에 벌어질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해질 것이다.

강동훈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의료진이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진료하는 '돈벌이 의료' 기관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돈벌이에 매달린다. 그러나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 비용 외에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수익성 논란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게다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장 가격'이 매겨질 텐데 공급자의 정보 독점이 강한 의료의 특성상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게 뻔하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처럼 말이다. 실제로 이런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가벼운 질병으로도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온다.

정부는 이런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허용되므로 국내 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여덟 곳이나 되는 데다 정부는 최근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며 이런 '예외' 지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또, "외국계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 병원에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없애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조선일보> 12월 19일치 사설)

무엇보다 정부 자신이 온갖 핏수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영리병원은 금지돼 있으니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 진료비를 마음

대로 올릴 수 없으니 '부대사업'으로 돈벌이 허용하기, 신의료기기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안전 규제 완화하기, 국내 병원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해외 투자로 돈벌이 하기 등. 이런 정책들은 병원들이 더욱 수익성을 좇도록 부추기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병원비 통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이런 조처들이 노리는 바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조처다. 그동안 보건 의료 운동 진영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사실상 국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해 온 까닭이다.

무리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제4차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뒤 어떻게든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을 만들려 애써 왔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가 두 차례나 망신만 당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2014년에 설립이 추진됐다가 무산

된 산일병원은 응급 처치 시설도 갖추지 못한 데다 기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엉터리 병원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유치에 나섰다가 철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올해 2월에 처음 사업계획서를 냈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측이 이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실제 투자자가 한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인이 한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우려 한 셈이다. 산일병원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제주도 측이 알아서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 그 뒤 한 달도 안 돼 투자자 명이가 바뀐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논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비밀에 붙였다. 병원 설립을 위한 건축계획은 4월에 승인돼 이미 공사는 시작됐다.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뒤 여섯 달을 묵혀 뒀다가 이를 강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광범하다. 올해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 반대 의견이 대체로 70퍼센트 안팎을 기록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저지법국민 등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실제로 문을 열 때까지 승인을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동시에 벌써 거론되고 있는 제2, 제3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운동도 벌여 나가야 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녹지그룹은 중국과 제주도에서 "병원 10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와 기금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실현된다면 <조선일보>가 바라는 대로 독이 흠뻑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장호중